

---

# 현대 사회에서 표준어의 개념과 기능

최경봉 · 원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이 글은 표준어의 개념과 기능을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sup>1)</sup> 그러나 단순히 표준어의 개념을 규정하고 그 기능에 대해 원론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표준어 개념과 표준어 의식의 특성을 표준어 정책의 역사와 관련지어 조명해 보고, 이를 근거로 표준어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 1. 표준어의 형성과 표준어 의식

조선의 언어는 상술한 것처럼 어음·어법의 각 방면으로 표준이 없고 통일이 없으므로 하여, 동일한 사람으로도 조석이 상이하고 동일한 사실로도 경향이 불일할 뿐 아니라, 또는 어의의 미상한 바가 있어도 이를 질정할 만한 준거가 없기 때문에, 의사와 감정은 원만히 소통되고 충분히 이해될 길이 바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문화의 향상과 보급은 막대한 손실을 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급일 세계적으로 낙오된 조선 민족의 갱생활 첩로는 문화의 향상과 보급을 급무로

---

1) 이 글은 새로운 문제의식 하에서 쓰인 것이지만,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관계로 논의 내용 중 일부가 최경봉(2006)과 겹친다. 글의 성격상 겹치는 부분을 특별히 표시하지 않고 기술했음을 밝힌다.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요, 문화를 축성하는 방편으로는 문화의 기초가 되는 언어의 정리와 통일을 급속히 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조선어사전편찬회 취지서(1929)

조선의 문화가 향상되지 못한 것이 조선어의 표준을 마련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되었다는 생각은 조선어 사전을 만들기로 결의한 사람들의 절박감을 잘 보여 준다. 당시 사람들은 절박감으로 우리말의 표준을 제시하고자 했고, 이는 우리말 사전을 완성하는 힘이 되었다. 사전이 완성된 후에야 한국어 화자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한국어의 근간(根幹)을 확인하고 이를 의식적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어의 근간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할 당시, 사전 편찬자들은 우리말의 표준을 이렇게 제시했다.

大體로 現在 中流 社會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

- 한글 맞춤법 통일안(1933)

그런데 조선 초부터 시작된 서울 중심의 문화 활동 경향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위의 원칙이 현대 한국어를 새롭게 규정했다고 하기는 어렵다. 보급과 확산의 문제와 별도로, 수세기에 걸쳐 서울말이 지배 언어로 자리를 잡았음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말의 표준'을 시급히 정해야 한다는 절박감은 최소한 '서울말을 표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지역어를 표준으로 할 것이냐'를 결정하지 못한 데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언어의 정리와 통일을 급속히 꾀하'는 일의 어려움은 '대체로'와 '중류 사회'라는 기준이 지닌 모호함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체로 쓰는 서울말'과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은 그 대상이 분명할 것 같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이를 규정하는 것은 막연한 일일 수 밖에 없었다. 언어의 사용례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않았던 1930년

대에 ‘대체로’의 범위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 중류 계층이 분명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중류 사회의 말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이처럼 표준의 기준과 실체가 연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체로 쓰이는 말’과 ‘중류 사회의 말’이라는 기준은 ‘규칙에 맞는 표현’ 혹은 ‘바른 본’이 대신하게 되었다. 언어의 표준화 사업이 “바람직한 말을 찾아 중류 계층에게 걸맞은 말을 건설한다.”는 목표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두루 쓰이는 조선말 가운데에 그 바른 본”(김두봉 《조선말본》, 1916)이나 “가장 흔히 쓰이고 소리 좋은 말”(주시경 《말모이》, 1914)에서 그러한 조짐을 감지할 수 있고, “학리에 맞고 규모가 있는 말로 표준을 삼는다.”는 표준어 사정 원칙에서 당시 언어 표준화 사업의 기본 원칙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1930년대 서울말에서 일반적으로 진행된 움라우트 현상을 인정하지 않은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표준화를 주도했던 이들은 일반화되었던 ‘곰팡이, 지팡이, 애끼다’를 인정하지 않고, ‘곰팡이, 지팡이, 아끼다’를 표준 어휘로 인정하였다. 원형을 파악하는 문제를 중시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한 같은 의미였지만 형태만 달랐던 ‘가르치다(敎 指)’와 ‘가리키다(敎 指)’를 ‘가르치다(敎)’와 ‘가리키다(指)’라는 별개의 단어로 구분한 것이나, 일반적으로 ‘다르다(異)’와 혼용되었던 ‘틀리다(誤 異)’의 의미를 굳이 ‘틀리다(誤)’로 제한한 것에서도 ‘바른 본’을 중시하는 표준어 의식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당시의 현실적 조건상 ‘대체로 쓰는 서울말’과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이라는 규정은 표준어의 실질적 기준이 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현재의 표준어 규정은 어떠한가?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표준어 규정(1988)

여기서 중요한 점은 ‘대체로’가 ‘두루 쓰는’으로 ‘중류 사회’가 ‘교양 있는’으로 대체되었지만 ‘표준’의 막연함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다. 규정상으로는 ‘공통어로서의 표준어’를 제시하고자 했으면서도 공통어의 실체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분명치 않기 때문이다. 이는 표준어 규정과 별도로 ‘바른 본’을 제시하는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는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표준어 정책에서 핵심적인 일은 개별 어휘소를 대상으로 표준어 사정을 하고 이 결과를 국가가 고시한 어문 규범에 의해 어휘 목록의 형태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에 발맞춰 국어사전에서는 도그마가 된 어휘 목록을 기준으로 ‘맞는 어휘로서의 표준어’와 ‘잘못된 어휘로서의 비표준어’를 구분해 제시하며 국가가 고시한 어휘의 사용을 유도한다. 그러나 문제는 국가가 나서서 고시한 어휘가 한국어의 극히 일부일 뿐이라는 사실이다.

1936년 당시 표준어 사정안을 대중에게 공포하면서 우리말 어휘를 써야 할 어휘와 쓰지 말아야 할 어휘로 나눈 것은 언어를 기획할 수 있다는 근대적 인식의 극단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표준어 규정집에 제시된 6,000여 개의 표준어는 우리말의 사용 지침이 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한계 때문에 당시 규범집에 제시된 어형을 기준으로 규범의 원칙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표준어를 파악하는 것은 원칙과 원리의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그러한 경향은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다.

김선철(2008: 75)에서는 “공적으로는 지금까지 국가가 고시한 어문 규범에 언급된 3,500여 개의 단어들만 표준어가 되며, 이것만을 표준 발음법에 맞게 사용하는 사람을 표준어 사용자라고 해야 한다. 당연히 이런 조건 하에서는 우리나라에 표준어 사용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국가 규범으로서의 표준어 개념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그의 문제의식은 “인위적인 어휘 목록 개념의 표준어가 설사 국어학적 의미가 있을지라도 공통 방언의 성격을 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 정책면에서 의의를 찾기 어렵다(김선철, 2008: 76).”에서 분명해진다.

이런 점에서 표준어 개념을 어휘의 규범이 아닌 공통어의 개념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제기가 설득력을 얻는다. 국가가 모든 어휘의 형태를 결정하여 공통어를 제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위적으로 설계한 표준어가 실제 언어생활에서 제 역할을 하기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재는 언어의 사용례가 충분히 축적되어 ‘두루 쓰는 말’의 의미가 이전보다 분명해졌다.

그런데 공통어로서의 표준어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표준어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는 두 가지일 것이다. 첫째는 ‘공통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서울말이 공통어라고 한다면, 서울말의 실제에 대한 논의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특히 지역 공간과 지역 언어가 분명하게 연결되던 시대와 달리 현대는 지역 공간과 지역 언어의 연결 고리가 분명하지 않은 시대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통어가 생성되고 활용되는 공간적 범위를 서울로 한정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따를 수 있다.

둘째는 언어 정책의 방향과 관련한 문제이다. 공통어로서의 표준어를 확립하는 표준어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언어 정책은 공통어의 변화 추이를 조사하고 기술하는 데 있을 것인데, 이러한 기술주의적 정책을 바람직한 언어 정책으로 볼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 제기에 어떻게 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 2. 공통어로서의 표준어, 그 개념과 범위 그리고 구현의 문제

이 장에서는 공통어로서의 표준어 개념을 짚어 보면서, 현재 상황에 걸맞은 표준어 개념을 정립하는 문제를 거론할 것이다. 또한 공통어로

서의 표준어를 제시하는 가장 유력한 매체로서 국어사전의 기능과 기술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 2.1. 공통어의 개념과 범위

표준어를 제정했을 때부터 ‘표준어’는 ‘공통어’와 같은 말이었다. 이는 표준어와 공통어가 공히 서울 방언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표준어 정책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표준어는 다양한 지역 방언을 수용하거나 이를 가공하는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되기도 했다. 표준어를 어느 특정 지역 방언이 아니고 이상적인 공통어로 보고자 했던 것이다. 이는 표준어와 방언의 대립 구도 혹은 서울 방언과 기타 지역 방언의 대립 구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흐름은 표준어를 이상적인 공통어로 개념화함으로써, ‘공통어로서의 표준어’의 개념을 모호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 그러나 서울 방언과 지역 방언이 융합한 표준어를 만들고자 했어도 이는 부분적인 측면에서의 융합일 수밖에 없었고, 음운, 형태, 통사의 체계상 표준어는 서울말이었다. 따라서 ‘공통어로서의 표준어’의 실재를 서울말의 사용 및 변화 양상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음은 자명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언어 상황이 표준어 제정 당시와 달라졌고 이에 따라 서울말의 위상도 변화했다는 사실이다. 가장 큰 변화는 표준어 정책이 지속되면서 서울말이 지역 방언의 틀을 벗어난 것이다. 교육, 행정, 문화의 중앙 집중 그리고 미디어와 통신 매체의 발달로 문화적 결속력이 커지면서 서울말의 전국어화는 더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방언의 소멸을 우려하지만 실질적으로 방언의 소멸을 지연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점에서, 표준어와 방언의 대립 구도도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공통어를 서울말이라고 특별하게 한정하는 것은 언어 정책상 거의 의미가 없다. 서울말 화자를 서울 지역 거주민으로 한정할 수 없는 것처럼, 공통어의 사용 현황을 조사하는 것을 서울 지역으로 한정시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서울과 지역 간의 실시간 교류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어생활 비중이 늘어나면서 언어의 지역적 경계가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은 ‘서울말이 전국적으로 사용되면서 공통어의 변화를 이끄는 요인이 전국적 범위에서 발생한다.’는 말로 정리할 수 있다. 즉 공통어의 생성과 활용이 전국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말이다. 이는 방언의 생성과 활용이 지역적으로 고립화되는 것과 대조되는 현상이다.

공통어를 서울말로 한정하는 것의 언어 정책상 의미가 갈수록 하락하는 것은 한국의 정치 상황과도 관련되는 문제이다. 현재 상황으로 볼 때 한국 내에서 공통어의 변화를 불러올 만큼 지역적 세력권이 재편될 가능성은 없다. 그러나 남북통일에서 비롯되는 국가 영역의 변동을 기점으로 공통어가 새롭게 정립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통일의 방식에 따라 공통어의 정립 방식도 달라지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공통어의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공통어의 범위를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sup>2)</sup>

특정 지역에서 생성되고 활용되는 방언이 공통어의 역할을 하는 시대에서 전국을 기반으로 한 공통어가 전국을 기반으로 생성되고 활용되는 시대로 변화하면서, 근대적 표준어 개념으로 현재의 공통어를 설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통일의 시대에 공통어의 정립 문제는 새로운 계획이 필요한 일일 수 있다.

그렇다면 공통어를 제시하고 활용하는 일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

---

2) 남북통일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공통어의 형성을 자연적인 흐름에 맡길 수만은 없을 것이다. 《겨레말큰사전》 편찬과 같은 작업의 결과는 공통어의 형성이 민족 화합의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인위적 토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는가? 공통어의 전모를 보여 주고, 공통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매체는 국어사전이다. 앞서 표준어 규정을 만들고 이를 통해 사전 편찬의 기틀을 마련했던 선각자들 역시 공통어로서의 표준어를 제시하는 방안은 사전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했었다.

## 2.2. 공통어의 구현을 위한 국어사전의 체제와 기능 문제

‘공통어로서의 표준어’를 보여 주는 국어사전이라면 공통어로 규정한 언어의 면모를 최대한 정밀하게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즉 다양한 어휘를 최대한 수록하여 현대 한국어의 전모를 보이고 그 사용역(使用域)과 용법을 정밀하게 기술하여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통어로서의 표준어를 보여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이더라도 그것이 규범 사전을 지향한다면 기술 체제는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국어사전은 규범적으로 바른 언어형을 특별히 제시하여 언어 사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는 기술 체제를 갖추게 될 것이다.

표제어의 수록과 그것의 뜻풀이에 한정해 보면<sup>3)</sup>, 현재 국어사전의 편찬 방식은 공통어로서의 표준어를 수록하고 이것의 사용역과 용법을 보여 주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규범적인 어휘와 비규범적인 어휘를 구분하여 보여 주는 등 규범 사전으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이는 현재의 어문 규범을 직접적으로 소개해야 하는 것 또한 사전의 의무라고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근래 편찬되는 국어사전은 현대 한국어의 전모를 보여주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

3) 본 논의에서는 표준 발음 및 문법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소통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다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어휘일 것이기 때문에 우선 이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했음을 밝힌다.



검은띠, 호빵, 덩동댕, 맨얼굴, 시끌버끌하다, 신통찮다, 아싸, 어물  
 쨍대다, 얼어죽다, 얼음땡, 여리여리하다, 오물조물, 왜냐면, 용케, 울  
 그락불그락, 짜맞추다, 빈집털이, 신김치, 손글씨, 아름다움, 주눅들다,  
 기러기아빠, 덮어쓰기, 얼짱, 속쓰림, 새터, 가시오가피, 서리태, 뽕세  
 다, 알짬없다, 뺑뺑다, 뽕사리, 통굽, 콩쥐, 팔쥐, 뽕야, 속닥하다, 손뽕,  
 애엄마, 안마, 탕자탕자, 털복숭이, 패대기, 간판급, 군필자, 금고털이,  
 놀토

- 《고려대 한국어사전》(2009)에 수록된 신어 일부

이처럼 국어사전에서의 신어 수록 양상은 공통어에 대한 인식 양상  
 을 잘 보여준다. 국어사전 편찬자는 새롭게 쓰이는 어휘형을 관찰하고  
 이것을 사전에 등재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그 판단은  
 일반적인 쓰임을 보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객관적 평정(評定) 작  
 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때 평정 작업에서 중요한 기준은 해당 어휘가 어느 지역에서 쓰이  
 는 말이나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쓰이느냐이다. 즉 평정 작업은 전국적  
 단위로 이루어지며 산출된 모든 언어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어휘  
 가 서울말에 속하는지 아니면 지역 방언에 속하는지를 판별하고, 지역  
 방언이라면 서울말에 없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인지 아닌지를 판별  
 해야 했던 조선어 학회 사전 편찬자들에 비한다면 오늘날 사전 편찬자  
 의 어휘 선정 기준은 비교적 간단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규범적 어휘와 비규범적 어휘를 구분하여 보여 주는 것은 현재 표준  
 어 규정에서 표준어와 비표준어로 갈랐던 특정한 형태에 한정될 뿐이  
 다. 그러니 성문화된 규범이 사라지거나 복수 표준어가 확대된다면 사  
 전은 자체의 편찬 기준으로 어휘 평정 작업을 진행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공통어를 보여 주게 될 것이다. 편찬 중인 사전이 참조해야 할  
 규범은 이전에 출간한 사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사전이 편찬되는 순간  
 사전은 그것 자체로 하나의 규범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공통어로서의 표준어가 확립되었을 때, 별도의 표준어 규정은 의미가 없는 것인가?

### 3. 규정(規定)으로서의 표준어, 그 한계와 가능성

이 장에서는 표준어 규정의 존재 의의를 두 가지 차원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는 현재 표준어 규정이 존속되는 것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복수 표준어의 확대를 제안하는 것이다. 이는 표준어 규정이 필요한 것이라면 최대한 복수 표준어를 지향하자는 것이다. 둘째는 공통어로서의 표준어가 확립된 상태에서도 표준어 규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는 공적 영역에서의 언어 통제는 언어의 다양성 보장이라는 형식적 평등보다 발전한 개념일 수 있다는 관점에 따른 것이다.

#### 3.1. 표준어 규정의 존속과 복수 표준어의 확대

규범은 보수적이고 현실 언어는 역동적이기 때문에, 현실 언어와 규범의 괴리 문제는 언어가 사용되고 규범이 존재하는 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현재의 표준어 정책을 유지하는 한 이러한 괴리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지만, 현재의 정책 안에서 현실 언어와 규범의 괴리를 최소화하고 언어 사용의 통일성을 도모하는 시도는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2011년 8월 31일은 표준어 정책사에서 의미 있는 날이었다. 국립국어원에서 국민 실생활에 많이 사용되지만 표준어 대접을 받지 못한 39개의 단어들을 표준어의 반열에 올려놓았기 때문이다.

‘간지럽히다, 맨날, 허접쓰레기’ 등은 자주 쓰이는 말이면서도, ‘간질이다, 만날, 허섭쓰레기’ 등과 같은 표준어와 의미가 같다는 이유로 잘 못된 말로 취급되었다. ‘나래, 눈꼬리, 두루뭉실하다, -길래’ 등은 ‘날개,

논조리, 두루뭉술하다, -기에’ 등과 어감과 쓰임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비표준어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 누구나 먹는 ‘짜장면’은 생소한 ‘자장면’에 표준어 자리를 양보해야만 했었다. 단일한 표준어에 대한 집착이 규범과 실제의 괴리를 키웠던 것이다.

8월 31일의 조치는 규범과 실제의 괴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복수 표준어를 인정하는 현행 규범에서 찾을 수밖에 없음을 웅변하고 있다. 현행 규범에서 부분적으로 복수 표준어를 인정하고 있는 것은 단일 표준어를 원칙으로 하는 데에서 오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언어 실태를 고려할 때 복수 표준어라는 예외적 조항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언어 실태 조사의 결과를 규범에 반영하는 일은 표준어를 바꾸는 방향이 아니라 현실과 기존 원칙을 동시에 인정하여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한 예로 《큰사전》에 표준어로 등록되었던 ‘미숫가루’와 ‘상치’는 현재 규범에 비취볼 때 ‘미숫가루’와 ‘상추’로 바뀌 써야 하지만, 아직까지도 과거 규범의 잔상이 남아 ‘미숫가루’와 ‘상치’ 쪽으로 기울어지는 사람이 많다. 그렇다면 대등한 사용을 보이는 어휘 중 어느 하나를 표준어로 삼아 오류 표현을 양산하는 것보다는 둘을 모두 표준어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그동안 표준어 정책이 인위적인 오류 표현을 양산하였다면, 복수 표준어의 확대는 혼란보다는 안정적 글쓰기를 돕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복수 표준어를 확대하려는 입장에서 볼 때, 39개의 단어가 얻은 표준어의 지위를 다음과 같은 단어가 얻지 못할 이유를 찾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결판지다, 꺼림칙하다, 어줍잖다, 으시대다’가 비표준어이고 그에 대응되는 ‘거방지다, 꺼림칙하다, 어줍잖다, 으시대다’가 표준어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언어 현실을 반영해 복수 표준어를 확대하는 것은 남북 언어의 통일 문제와 연관시켜 볼 때도 필요한 일이다. 흥미로운 사실은 8월 31일 새롭게

표준어의 지위를 얻은 말들 중 상당수가,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단어들이 이미 북한의 문화어로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통일 지향적인 어문 정책을 위해서라도 남한의 언어 실태와 남북한 언어 규범의 차이를 분석하면서 복수 표준어를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복수 표준어의 확대는 결국 표준어에 대한 인식과 그것의 규정 방식을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복수 표준어가 많아진다면 표준어 사정 원칙과 관련한 조항이 거의 무의미하게 될 것이고, 표준어를 규정하는 역할은 결국 사전이 담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언어 현실의 변화를 사전이 수용하고, 사전의 기술 내용은 언어 현실을 통일하는 규범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곧 공통어로서의 표준어를 구축하는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 3.2. 언어의 공공성 확보와 표준어 규정의 위상 문제

앞 절에서는 단일 표준어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언어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복수 표준어 정책이 궁극적으로는 공통어로서의 표준어를 구축하는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런데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언어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언어를 간단히 하는 것도 언어 발전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점이다. 특히 공적인 언어의 경우 간단하고 명확할수록 좋을 것이다.

공적 언어의 간명화 문제를 국가 공동체의 원활하고 민주적인 의사소통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사용할 어휘를 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공적 영역의 공공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언어 통제의 방법론을 정교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의 표준어 규정은 언어 통제가 필요한 영역과 그렇지 않은 영역을 구분하지 않아 표준어 규정이 전체 언어의 통제로 확대될 여지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언어의 간명화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미추다’와 ‘맞추다’를 ‘맞추다’로 통합시켜 표준어로 삼은 것은 간명화의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이때 ‘미추다’와 ‘맞추다’를 구분한 것이 의미의 정교화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의 통합은 언어 사용자의 수월성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윗도리’와 ‘웃어른’으로 구분하여 쓰는 ‘윗-’과 ‘웃-’도 하나로 통합하여 쓸 수 있을 것이다. ‘대장장이’나 ‘개구쟁이’에서 ‘-장이’와 ‘-쟁이’도 마찬가지다. ‘세 마리, 석 돈, 서 말’ 등으로 구분해 온 수의 표현이 복잡하면서도 현실적인 의미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서 ‘세’로 통합하는 것 또한 간명화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인위적 규범이라 할지라도 현실 언어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현실 언어와 공존할 때 간명화한 규범의 실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언어의 간명화와 언어의 다양화라는 서로 다른 가치는 어떻게 조화할 수 있는 것인가? 언어 정책이 고민해야 할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일 것이다. 현재 생각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는 간명화한 형태와 현재의 표준어를 복수 표준어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복수 표준어 중에서 간명화된 언어형은 교육, 행정, 법률 분야 등 공적 영역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간명화는 새로운 언어 형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용 어휘 목록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단일 표준어 원칙은 표준어의 경직화를 초래하였지만, 단일 표준어 원칙의 중요한 정신은 하나의 의미에 하나의 표준어를 대응시켜 의사소통을 편리하게 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단일 표준어 원칙의 적용 영역을 제한한다면 언어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교육, 행정, 법률 영역에서 특정 전문어를 제외하고 언어의 사용 범위를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한다면 행정과 법률 영역의 문서가 간단해지고 더불어 국민의 문식력(文識力)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표준어 정책의 기본 정신은 다른 언어권의 정책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20여 개국에서 서로 다른 규범을 가진 상태에서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스페인어의 교육 문제는 시사적이다. 스페인어권 화자와 의사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스페인어 교육을 위해서는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언어 형식을 가르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서 여러 변이형 중 구조적으로 간결한 것을 가르치거나 여러 규범 중에서는 문화적으로 발전된 곳의 스페인어를 택하는 방법을 취한다. 그러나 스페인어권 국가들을 선도하는 중심 국가가 없는 한 이러한 교육 방식은 구조적으로 간결한 변이형을 중심으로 한 스페인어 규범을 만드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언어의 예는 아니지만, 문자를 간명화한 예들은 간단하고 명확한 기호의 장점을 잘 보여 주고 있다. 중국 정부는 간체자를 통용시키면서 한자에 대한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일본은 1981년 일상 사회생활에 사용하는 한자의 기준으로 1,945자의 상용한자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소리와 뜻이 유사한 한자의 통합을 통해 추려낸 상용한자가 국한혼용(國漢混用)의 현실화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문자의 간명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언어 및 문자의 습득을 간편하게 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실 언어를 바탕으로 간명화를 진행한다면, 표준어는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공격 의사소통을 쉽고 편안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처럼 표준어의 간명화는 언중들이 쉽게 말하고 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표준어 정책의 지향을 잘 보여 준다. 특히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언어의 소통 문제가 복지的重要内容이 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에도 공적 영역에서 표준어의 간명화 작업은 필요한 일일 것이다.<sup>4)</sup>

---

4) 이주 여성 중 한국어 수준이 높은 사람들조차도 공공 기관에서의 의사소통이나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의 의사소통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불편은 대개 제출 서류와 학교 알림장 등에서 사용되는 표현이 정제되지 않은 데에서 비롯된다.

#### 4. 결론을 대신하여

공통어의 기반이 확고해지고 복수 표준어가 확대되는 현실을 볼 때, 표준어 정책은 결국 '공통어로서의 표준어'를 지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어사전은 언어 사용의 안내서로서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언중들의 언어 사용을 이끄는 언어 정책은 빛을 잃게 될 것이고, 언중들의 언어 사용을 기록하고 그 변화 추이를 추적하는 기술주의적 정책이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언어 정책에서 언어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문제가 정책의 한 축이 되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오늘날 표준어 정책의 요체는 언어의 다양성 확보와 언어의 공공성 확보라는 두 가지 면을 조화하는 데 있을 것이다. 표준어 규정을 통한 언어의 간명화 문제를 특별히 거론한 이유는 이를 환기하기 위해서이다.

## 참고 문헌

- 김민수(1973), 《국어 정책론》, 고려대학교 출판부.
- 김선철(2008), 표준어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위하여, 《한국어의 규범성과 다양성 - 표준어 넘어서기 -》, 태학사.
- 이상규, 조태린 외(2008), 《한국어의 규범성과 다양성 - 표준어 넘어서기 -》, 태학사.
- 조태린(2004), 계급 언어, 지역 언어로서의 표준어, 《당대비평》 26.
- 최경봉(2006), 표준어 정책과 교육의 현재적 의미, 《한국어학》 31.